

7.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30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행정국장)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7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오상)

□ 제안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자가통신망 이용기관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자가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제4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자가전기통신 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미정)

○ 이 개정조례안은

- ▶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자가통신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및 체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먼저, 대구시 자가통신망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 ▶ 자가통신망이란 사용자가 통신사의 임대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용기관이나 현장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하거나 매설하여 상호 연결 구축한 유·무선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제도적 근거로는 「전기통신사업법」⁸⁾이 있음.

8)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대구시는 2015년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수립을 통해 3단계에 걸쳐 총 사업비 190억원(전액 시비)을 투입하여 구·군, 사업소 등 시 산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을 시작하고 2019년 1월 완료하였음.

〈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진개요 〉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예산(억원)	190	80	75	35
대상기관(개소)	354	25	248	81
광케이블(Km)	730	125	385	220
공사구간		시(스마트광통신센터) ↕ 산하기관, 구·군	산하기관, 구·군 ↕ 사업소,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 구·군 ↕ 사업소, 주민센터 등
공사완료일		'17. 8. 30.	'18. 11. 12.	'19. 1. 22.

- ▶ 이후 신설 기관(읍·면·동, 사업소) 등에 대한 추가 구축을 통해 현재 379개 행정기관 대상으로 광케이블 781km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회선임대료 절감 및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임대통신망을 사용 중인 회선에도 지속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1.~4. (생략)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대구시 자가통신망 운영 개요 〉

(이용기관) 379개 행정기관 [구축 시 354개 → 379개(증 25)]

*시 5, 구·군 8, 사업소(시, 구·군 포함) 22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40

(설비현황) 광케이블 781km, 스마트광통신센터 2,621㎡(대구콘서트 하우스 지하 1층) 등

(이용범위) 스마트도시서비스 19개 분야

*교통, 환경, 방범, 방재, 행정, 보건, 의료, 복지, 에너지, 수자원,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주거

〈 대구시 통신회선 이용 현황 〉

(단위 : 회선, 억원/연간, 2022년 9월 기준)

구 분	전체		자가통신망		임대통신망		비 고
	회선수	금액	회선수	절감액	회선수	납부액	
합 계	17,544	179.7	6,082	109.2	11,462	70.5	
행 정 (인터넷)	6,103	75.9	629	55.2	5,474	20.7	
CCTV	11,441	103.8	5,453	54.0	5,988	49.8	구·군 포함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2조제4호에서 자가통신망의 이용기관에 공공기관 등을 추가하여 유관기관 상호간 비영리·공익 목적의 망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가통신망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⁹⁾에 따라 과학기술

9)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제2019-15호)」를 반영한 것임.

〈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안 제2조제4호) 〉

기 존	변 경
시의 소속기관, 자치구·군(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관련 행정기관	(추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5호, 2019. 3. 15. 시행)

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상호간 비영리·공익목적의 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 ▶ 그 밖에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 안 제10조 등에서는 올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임.

- ▶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음.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맞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내용 전반을 보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자가통신망 활용성 강화 및 조례 완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 다만,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회선임대료 절감을 위한 자가통신망 확장·구축과 함께 외부망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가통신망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 고**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5호, 2019. 3. 15. 시행)

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
2.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98호)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목적외 사용을 인정한 경우
3.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철도청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경우로서 철도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4. 「도로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교통정보제공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설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정보제공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상호간 비영리·공익목적의 정보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내 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이와 직접 연결된 자가전기통신회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조례가 개정되면 자가통신망 운영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에 기존 행정기관 외에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자가통신망의 활용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함께 자가통신망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인지?	○ 소요예산은 각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존에 구축된 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망 연계 등을 위한 작은 구축 비용만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 구축비용으로 총 190억원 정도로 투입하였으나 이후 운영을 통해 충분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총 102억원 정도를 절감하였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